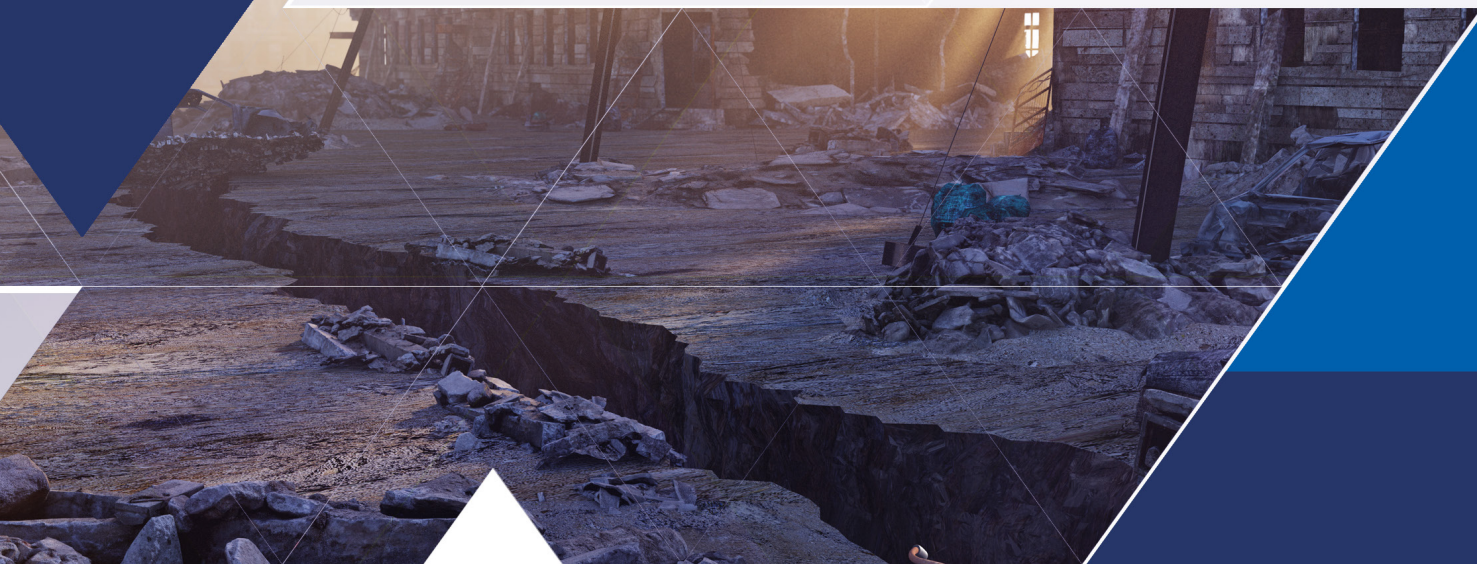


# 안전충남 이슈-브리프

## 코로나 19와 충남의 대응에 대한 소고

조기웅 / 교수 /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 코로나 19와 충남의 대응에 대한 소고

조기웅 / 교수 /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 1. 서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이하 코로나 19)는 한국은 물론 전 세계를 바꾸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웠던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전파라는 재난 대처 과정에서 각국은 물론 각 국내의 각 지역은 고유한 문화와 정치적 특성을 반영하여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 국가의 통제와 그에 따른 사람들의 협조와 스트레스 등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면 이를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가 1990년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거의 30년에 가깝게 시행되어감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통제를 비교적 쉽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정부의 개입이 상대적으로 적고, 반국가적 정서가 크며, 반면에 중국의 경우 국가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강한 특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중앙집권적 문화를 바탕으로 지방분권적 제도의 이점을 활용하여 감염병의 예방과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교적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 공무원과 정부, 민간의 시행착오와 개선의 끊임없는 노력과 보이지 않게 묵묵히 따라준 국민들의 협조 덕분이다.

여전히 코로나 19의 위협이 지속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응책의 개발이 절실한 시점에서, 각국의 고유한 특성이 국가별 감염병 대응 정책에 영향을 미치듯이, 각 지역별 특성이 지역별 감염병 대응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남도(이하 충남)의 코로나 19 대응에서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부족하나마 소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충남은 국가의 중심에 위치하고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와 중부지방의 가장 큰 도시인 대전광역시를 인접하고 있는 지역이며 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이 지역의 코로나 19에 대한 대처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 글에서는 대략적 국내·외의 코로나 19 상황을 살펴보고 충남 지역의 코로나 상황을 정부의 기능별로 정부 조직과 인사, 복지와 경제 그리고 안전의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 2. 국내·외의 코로나 19 대응

### 1) 외국

외국의 코로나 대응은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정부의 성격으로 접근하면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인의 자유와 집단의 안전이라는 두 가지의 가치 중에 어느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지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가치관과 태도에 따라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이 달라짐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최근 G2로 서로 다양한 방면에서 대치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은 코로나 19 대응방안에서도 서로 상반되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중앙집권적인 나라이다. 반면에 미국은 중앙 정부가 간섭이 싫어서 이주한 사람들과 이들의 사상에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로서 비교적 반(反)국가적인 정서가 강하다. 코로나가 시작된 나라라는 점에서 그 오명과 함께 발생 초기에는 코로나 19 발생을 감추려고 하였다는 의혹이 있지만, 중국은 지역간 이동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코로나 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국가가 개인 생활은 물론 이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정책으로 코로나 19의 확산을 진정시켰다. 반면 미국은 그 시작부터가 반국가적인 측면도 있는데다가 KKK단과 같은 반인종 집단이 마스크를 쓰고 흑인에게 테러를 감행한 것에 대한 반감으로 복면금지 법(anti-mask law)이 상당수의 주(state)에서 집행되고 있는 나라로서 중앙정부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다.

즉, 국가의 개입을 반기지 않는 미국의 주와 국민들은 ‘마스크를 쓰느냐 마느냐’ 가지고도 주(state)별로, 개인별로 차이가 크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의 말에 의하면, 마스크를 쓰면 오히려 코로나 19에 걸렸다고 인식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피하기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니, 한국 사람들은 이러한 미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이를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 외에도 미국의 비싼 의료시스템과 트럼프 대통령과 전문가들의 엇박자, 이로 인한 혼란으로 미국은 코로나 19의 대응에 있어서 악화일로(惡化一路)를 걷고 있다. 그 외에 다양한 외국의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은 국가의 시스템과 개개인의 문화와 성향에 따라 많은 시사점과 문화적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사회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 2) 대한민국

한편,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 시스템은 기존의 시행착오에서 오는 학습효과 속에서 자못 미국과 중국의 대응의 중간 지점에서 애쓰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즉, 한국은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통제하지만 중국과 같이 특정지역의 출입 및 이동을 통제할 정도로 강압적인 통제는 아니다. 그렇다고 미국과 같이 국민들이 마스크 착용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거나, 중앙정부의 개입을 꺼리지도 않는다.<sup>1)</sup> 전화위복이라고 하면 좀 슬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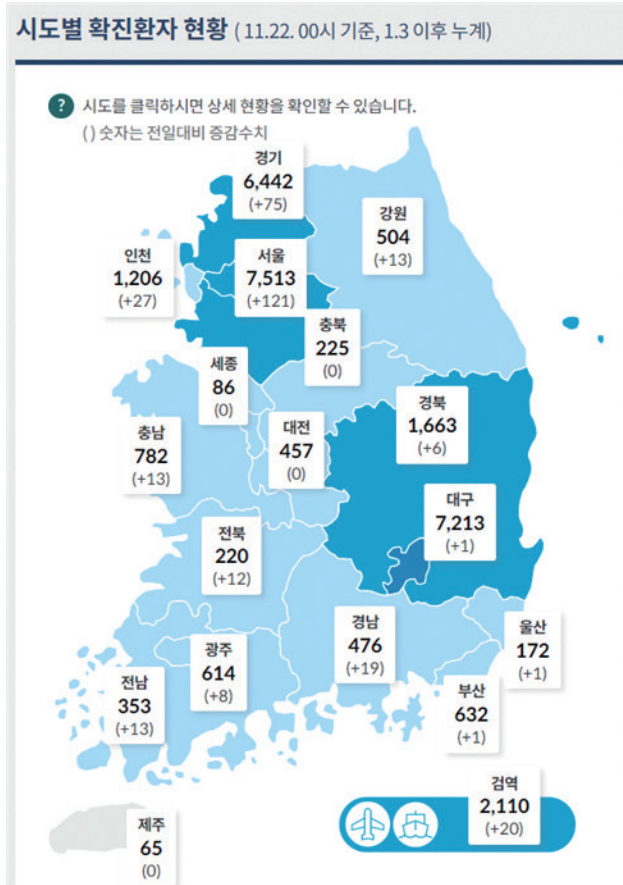
1)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마스크 쓰는데에 긍정적인 시선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물론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박근혜 정권은 물론 그전의 진보정권에서부터 복면금지 법에 대한 논의와 입법의 논의가 있었다(구영식, 2015)

이야기이지만, 이미 미세먼지로 인해 마스크를 쓰는 것에 상당수의 국민이 마스크 쓰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일부의 사람들 중에 마스크 대란이 있음에도 이미 마스크를 미세먼지를 대비해서 집에 싼 값으로 비축해 놓은 사람도 있었다. 또한 슬픈 사실이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5년과 2018년의 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이하 메르스)에 대한 대응 경험으로 우리나라는 코로나 19와 비교적 유사한 메르스에 대해서 많은 정책이나 제도 등이 일정부분 갖추어져 있었다. 예를 들면, 메르스 사태 이후 메르스 사태로 희생한 사람들에게 일정부분 보상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재난 이후 스트레스 관련 시스템, 당시 정보공개를 꺼려한 나머지 메르스 환자의 이동 동선을 초기에 제공하지 않아 세간에 검증되지 않은 소문과 억측이 떠돌자, 이후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들의 동선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등 많은 시행착오로 인하여 감염병에 대한 어느 정도 시스템과 국민적인 자각이 갖추어진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미국과 달리 대한민국의 전 국민 의료보험 시스템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이러한 코로나 대응과 국민들이 병원에 접근하는데 부담감을 낮춰주어, 미국과 같은 대규모 감염 사태는 일정부분 막을 수 있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 정부와 시민이 마냥 잘한 것만은 아니다. 코로나 19 발생 초기에 대외 무역과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나머지 초기 대응이 느슨하여 외국의 입국자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여 코로나 19의 확산을 조기에 대처하지 못하였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기도 한다. 또한 이미 메르스 사태 때 어느 정도 매뉴얼이 갖추기는 하였으나, 코로나 19 초기 대응 매뉴얼 등에서 추가적인 한계를 드러내어 혼선과 변경이 반복되고 있다. 물론, 강력한 전염성을 가진 신종 전염병의 방지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안 되겠다. 그리고 2020년 3월 코로나 19의 1차 유행시, 자치단체 사이에서 자치단체의 해당 지역주민의 안전만을 우선시 하거나 혹은 지역주민이 자신의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지역간 정부간 또는 시민들간 일부 혼선과 갈등이 있던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 3. 충남의 코로나 19 대응

충남지역은 수도권과 남부지방을 연계하는 지역으로서 지리적으로 코로나 19 방역의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이다. 충남의 코로나 19 발생상황을 보면, 2020년 11월 22일 0시 기준으로 충남지역의 코로나 19 확진자는 782명으로 수도권에서 가깝고 다양한 지역에서 사람의 유입이 많은 지역의 특성상 코로나 19의 확진자 수가 서울 7513명, 경기 6442명과 같은 수도권과, 코로나 19 발생 초기 대량의 확진자가 발생한 경북과 대구 지역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아 강원 504명, 전라북도 220명, 충청북도 225명에 비해 높다.



〈그림 1〉 2020년 11월 22일 0시기준 (1.3 이후 누계) 확진자 현황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http://ncov.mohw.go.kr/> (2020년 11월 22일 접근))

## 1) 충남 재난안전의 성과

코로나 19 상황에서 충남은 수도권으로부터 남부 지방으로의 코로나 19 전파를 상당수 막아 1차적인 방어막 역할을 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한 전국적으로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책을 실행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침체 상황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0년 9월 기준 15세-64세 고용률이 전년 동월 대비 0.7%만 감소하고 고용률이 2020년 1월 59.1%에서 9월 63.9%로 지속적 상승(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2020, p. 3)하여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서도 비교적 선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실업률은 3.1%로 인접 충북의 3.3%, 대전의 3.6%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있다(충청남도 일자리

진흥원, 2020, p. 4).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점을 보완한다면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충남이 앞으로 좀 더 나은 대처를 하는 지역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2) 충남 재난안전에 대한 제언

### (1) 정부 조직과 인사: 재난안전 책임자와 희생하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격려와 응원

2020년 전반기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서 충청남도 재난안전실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 및 주요 재난에서 주로 역할을 하는 공무원이 2급 공무원이 1명이고, 3급 공무원은 없는 것(충청남도 재난안전실, 2020)으로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 19와 같은 중대하고 긴급한 재난 상황에 대처하려면, 재난안전실에 보다 높은 직급의 공무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본부청으로 격상되었듯이, 보다 직급이 높은 공무원이 재난안전실에서 정책을 지휘할 때에 다른 부처와 협력과 지시 그리고 감독이 보다 원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재난안전과 직원들은 하루에 17시간을 일하기도 하였다(황재돈, 2020). 그 외에도 유사시 출동을 하는 경찰과 소방관, 코로나 19 속에서 가르치는 시간도 부족할 텐데 코로나 19 방역으로 바뀌는 시간표와 지침에 따라 희생하는 교사들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 관계자들(의사, 간호사 등)과 관련 공무원들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수많은 일을 그때그때 처리해나가면서 고생하고 있다. 현장에서 어떤 공무원은 ‘칭찬만으로 큰 위로가 된다’고 한 바 있다. 민간의 각각의 영역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한 시민들의 격려와 이를 서로 나누는 문화를 언론과 캠페인을 통해서 형성함은 물론 일상에서도 이러한 문화가 자연스레 이루어져,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사회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에게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분위기를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 (2) 복지: 코로나 19 상황으로 희생하는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보상

특히 재난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이나 대우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러한 사람은 앞서 언급한 경찰, 소방관, 교사, 공무원 등 다양한 직종에 걸쳐있다. 그런데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사회복지사들은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재난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고 희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특히 인구의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농촌의 초고령화로 인한 농촌 등의 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배인재, 2020). 예를 들어, 충남은 독거노인의 비율이 20.84%로 충북 21.43%로 전남의 25.49%, 전북의 22.98%에 비해 낮지만, 수도권과 대도시(대구,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등)가 20% 내외 혹은 그 이하 16% 정도에 있는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배인재, 2020). 비대면 상황에서 대면을 통한

보다 나은 복지를 실현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 19 이후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늘고 있고 사회복지사들은 중요하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 사태에 부모의 이혼 후 혼자 사는 예산군이 담당하는 중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사회복지사가 발견하여 목숨을 구한 경우(권남영, 2020)가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사회복지사들은 업무 중에 더욱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예를 들어, 대전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사 사회복지사는 1인당 아동 70에서 80명을 담당하는데, 불시 방문을 하는 경우 감염병 전파를 우려한 나머지 이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조혜원, 2020) 코로나 19 상황 취약계층 사람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코로나 19를 무릅쓰고 희생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일부 지방의 경우 사회복지 종사자가 우울증이 일반인보다 대략 5배에 이르고 이는 말기암 환자보다 높은 것을 나타내는 것을 볼 때(배인재, 2020), 사회복지사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배려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는 사회복지사의 급여가 높지 않고, 직접 대면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취약계층과 접촉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면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장애인을 대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이들에 대한 처우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의 이러한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사회복지사는 물론 코로나 19 관련 종사자를 포함한 관련 직군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취득한 공무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한다(김기운, 2020).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 및 관련 인력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의 인력을 대거 확충하고 사회복지 관련 시설에 대한 감염병 예방 대책과 지속적인 관리(고일환, 2020)를 생각해봐야 한다. 또한, 기존 사회복지사를 위한 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실현될 수 있게 하는 것과 코로나 19 관련 사회복지종사자에게 탄력 근무 및 휴가 제도를 강화하고, 이들을 위한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적인 시스템도 고려(배인재, 2020)되어야 한다.

### (3) 경제: 코로나 19 대비 경제와 취업의 문제

코로나는 전국적으로 뿐만 아니라 충남에도 예외 없이 경제적으로 치명적 피해를 주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코로나 이후 경제 상황을 보기 위해 코로나 19 이후 대전·충남지역 소비행태 변화를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충남지역은 물론 대전 지역의 역내소비가 감소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임병안, 2020). 결국 충남과 대전의 거주자 전체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57.6%는 타지역에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충남과 대전의 소비순유출 정도가 다른 지역보다 더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임병안, 2020). 이는 지리적으로 대한민국 중심에 위치하여 전국으로 소비가 흩어지기 쉬울 뿐만 아니라 지역의 서비스 및 여행, 운수 수요가 감소하면서 충남과 대전의 경제가 민감하게 반응하였다는 것이다(임병안, 2020). 다른 한편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 지역의 청년 고용률은 32% 내외의 전북과 37% 내외의 전남보다는 나은 실정이지만, 충북지역은 45%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전라남도, 2020 자료, 배정아 (2020)에서 재인용]. 따라서

충남에서 청년의 일자리 구축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노력뿐만 아니라 일자리 자체 외에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의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보다 거시적인 접근으로 우수한 교육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과 병행되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충남은 2020년 6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80만원의 농어민 수당지급을 결정하고(조형찬, 2020), 충청남도도는 2020년보다 11.9% 증가한 2021년 예산 8조7천113억 원을 제출하여 경제 활성화 및 뉴딜사업에 투자하려하고(양영석, 2020) 있다. 이와 같은 지역실정에 맞는 뉴딜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때 시작된 뉴딜정책이 아무런 문제없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미국의 뉴딜 정책은 대공황이후 미국의 치솟는 경제 불황과 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정책인데, 이전의 대통령인 후버대통령이 시장의 '보이지 않은 손'을 대공황 이후에도 여전히 맹신하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다. 이에 케인즈의 경제학적 이론에 기반<sup>2)</sup>하여 나타난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주장을 반영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러한 주장을 반영하여 1933년 뉴딜 정책을 시행한다. 뉴딜정책은 수년간 효과를 발휘하지만 장기간의 정부 지출로 정부가 지속적 투자를 부담스러워하며, 다시 뉴딜 정책 이후 경기는 1937년 다시 불경기를 맞이하고 1938년에는 실업자가 다시 증가하여 1000만명에 이르게 되고(이구한, 2003: 334; 이원복, 2004: 190)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 시기에 발발한 세계 2차 대전으로 미국은 불황을 탈피하였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충남의 정책결정자와 시민들은 이러한 뉴딜정책의 공헌과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여, 미래의 정책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이를 비판적으로도 보아 그 한계와 대비책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 (4) 안전: 코로나 19와 파급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미세먼지 및 독감에 대한 지속적 대비 그리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스트레스 대책

코로나 19는 다른 질환과 합쳐서 보다 위험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코로나 19가 기본적으로 폐질환임을 고려할 때 공기 오염 및 미세먼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미세먼지 문제가 지금은 상대적으로 관심 밖으로 뒤흔어져 있는 듯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19 상황이 조금 나아지자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미세먼지의 증가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미세먼지와 오염의 문제는 코로나의 확산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Boukerche & Mohammed-Roberts, 2020), 코로나 19외에도 다른 자연재난인 미세먼지, 공기오염 및 독감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비말 차단 마스크만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 수급이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KF(Korean Filter) 94 및 KF 84

2) 케인즈는 1929년 대공황의 원인분석을 제시한 '고용·이자·화폐의 일반이론'(원제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을 쓰고 그는 유효수요를 늘리는 것을 주장한다(김학순, 2013). 이는 당시 고전학파 주류의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대된다는 믿음을 가졌던 것에 반하여, 경기가 나쁠 때 임금을 낮추는 것은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유효수요를 늘리기 위해 정부의 공공사업과 국가 투자를 통한 고용을 촉진시킬 것을 주장한다(김학순, 2013).

마스크의 착용의 필요성을 보다 역설하여 코로나와 미세먼지를 둘 다 대비할 수 있게 하는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독감예방접종을 촉진하여 기저질환과 함께 일어나는 악순환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 이후 이혼과 자살률이 높아지고 사람들의 우울감과 스트레스 해소 등 추가적인 문제도 해결이 시급하다. 또한 80세 이상의 시민들은 코로나 19로 사망할 확률이 50대보다 20배 이상 높음은 물론, 40대 미만과 비교했을 때 수백 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김민수, 2020). 더욱이 노인들은 동영상 회의나 활동과 같은 온라인 접근이 한정되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방안이 더 한정적이다. 따라서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자영업자 및 외국인, 어린이 등 재난취약계층 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경제적인 문제는 물론 코로나 19와 미세먼지, 독감 등을 고려한 이들에 대한 다양한 스트레스를 다룰 수 있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4. 결론

코로나 19 백신이 나와 코로나가 곧 종식될 것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혹자는 코로나 19가 생각보다 더 오래가고 심지어는 “with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하는)시대” 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코로나 19가 쉽게 종식되지 않고 감기와 같이 코로나와 함께 하는 시대가 될지도 모른다고 한다. 하지만, 앞으로 코로나 19가 종식될지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코로나 19와 유사한 질병이 일어날 것이다. 혹자는 지구의 온난화가 지속되면서 과거에 땅속에 묻혀있거나 지금은 사라진 질병이 빙하 속에서 나와 다시 지구를 덮칠 수도 있다고 한다(Boukerche & Mohammed-Roberts, 2020).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제언과 더불어 우리는 코로나 19는 물론 이후에 있을 다양한 전염병과 재난에 맞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협력 플랫폼(collaborative platform)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한 가지 전염병이나 질병, 재난에 대비하는 일부의 기관과 협력 체제가 아니라 보다 다양한 기관과 조직이 더 많은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광범위한 체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말로는 쉽다. 하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이 단순히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과 사회 재난(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 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 핵심 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다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는 것이 재난이고 이는 워낙 광범위해서 이를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회와 공무원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그 이상에 조금씩 조금씩 나아갈 때, 우리 사회는 재난을 조금이라도 미리 감재(減災)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과 의식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쉽지는 않지만 항상 부족함을 인식하고, 미래의 재난을 대비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이 지속되고 유지될 때, 지금보다 나은 시스템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다양한 학계, 실무자, 공무원, 시민 등이 머리를 맞대고 항상 협력하고 노력하고 고민하여 지속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 참고자료

Boukerche, S. & Mohammed-Roberts, R. (2020). Fighting infectious diseases: The connection to climate change. <https://blogs.worldbank.org/climatechange/fighting-infectious-diseases-connection-climate-change> (Accessed 2020. 8.7)

고일환 (2020) <http://www.o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0049> (2020년 11월 22일 접근).

구영식 (2015). 복면금지법, 노무현 때 발의됐다가 폐기됐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63292](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63292) (2020년 11월 26일 접근)

권남영 (2020). 원룸서 혼자 살다 '극단선택' 중학생, 사회복지사가 살려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682134&code=61121211&cp=n> (2020년 11월 22일 접근).

김기운 (2020). "집이 위험하다"...코로나가 만든 사각지대 '가정 내 아동학대'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0100876407> (2020년 11월 22일 접근).

김민수 (2020). 코로나19 취약층은 '남성·노인·빈곤층·소수인종'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38082> (2020년 11월 22일 접근).

김학순 (2013). 위기의 자본주의를 구한 경기침체기 '만병통치약'. 신동아.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11872/1> (2020년 11월 22일 접근).

배인재 (2020). "코로나 팬데믹과 지역사회: 전라북도 사례". 코로나 팬데믹과 변화의 시대 학술발표. 전주: 전북대학교.

배정아 (2020). 전남지역 청년 일자리사업 정부 간 협력방안. 2020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박람회.

양영석 (2020). 충남 내년 예산 8조7천113억원...경제 활성화·뉴딜사업에 방점.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995052> (2020년 11월 22일 접근).

이구한 (2003). 이야기 미국사. 개정판. 청아출판사.

이원복 (2004). 만나라 이웃나라 미국2 역사편. 김영사.

임병안 (2020). 돈 빠져나가는 대전·충남...코로나19 경제생태계 '직격탄'  
<http://m.joongdo.co.kr/view.php?key=20201114010004966> (2020년 11월 22일 접근).

조형찬 (2020). 충남 '기본소득 실험'..성공/투데이  
<https://tjmbc.co.kr/article/rw-pEguRIH4Pg> (2020년 11월 22일 접근).

조혜원 (2020). [리포트]아동학대 기획- 사회복지사가 바라 본 '코로나19 발 아동학대 실태'  
<http://www.tjb.co.kr/sub0301/bodo/view/id/43851/version/1> (2020년 11월 22일 접근).

충청남도 재난안전실, (2020) 2020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  
[http://www.chungnam.go.kr/dept/board.do?mnu\\_url=/cnbbs/view.do?board\\_seq=338483&mnu\\_cd=ORNM&ENU00024&searchCnd=0&pageNo=1&pageGNo=0&showSplitNo=10&code=34](http://www.chungnam.go.kr/dept/board.do?mnu_url=/cnbbs/view.do?board_seq=338483&mnu_cd=ORNM&ENU00024&searchCnd=0&pageNo=1&pageGNo=0&showSplitNo=10&code=34) (2020년 11월 22일 접근).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2020). 충남 고용-노동 리포트.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충남노사민정협의회.  
 황재돈 (2020). "코로나 막자" 초과근무 일상인 충남도 공무원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91421> (2020년 11월 22일 접근).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금흥동)  
 TEL 041.840.1230 FAX 041.840.1199  
<http://www.cni.re.kr> 발행일 | 2020. 11 발행인 | 윤 황  
 편집인 | 조 성 편집디자인 | 경성문화사(044.868.3537)  
 ※이 책에 대한 저작권은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에 있으며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Center for Disaster & Safety Research

안전충남  
 이슈-브리프

2020 November

Vol.25